
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

2022. 3. 29.

기 획 재 정 부

순서

[제1편 202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]

- I. 재정운용 여건 및 기본방향 2
- II. 202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4

[제2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]

- I. 기금운용 여건 26
- II.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27

제1편
202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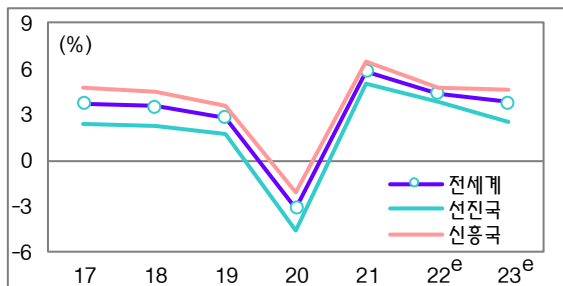
I 재정운용 여건

1. 대내외 경제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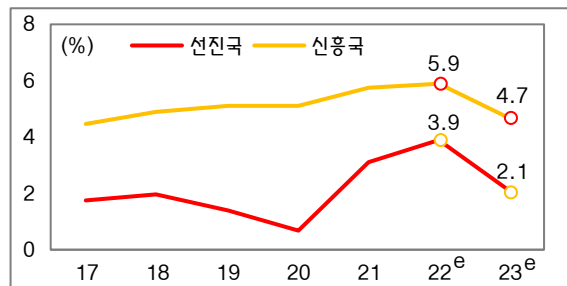
□ (대외) 경기 회복 속도가 점차 둔화되었으며, 불확실성도 확대

- 경제 정상화에 따른 빠른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, 물가는 올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한 후 점차 완화될 전망
 - * 최근 영국·프랑스·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방역조치 전면 해제 추진 중
 - * 세계경제 성장률(%) : ('17)3.8 ('18)3.6 ('19)2.8 ('20)△3.1 ('21)5.9 ('22^e)4.4 ('23^e)3.8
- 다만, 공급망 차질 장기화,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화, 중국 경제 둔화 등에 따른 경기·물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
- 디지털·저탄소 등 신산업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, 공급망 재편, 노동·환경기준 강화 등 경제 전반의 구조 전환 가속화

세계경제 성장률 전망(IMF, '22.1월)



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(IMF, '22.1월)



□ (대내)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, 구조적 문제도 심화

- 대외 불확실성에 더하여 가계·자영업자·한계기업 부채, 자산 시장 등도 경제·한시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
- 디지털·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,
 -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심화된 일자리·소득 격차, 인구구조 변화·지역소멸 가속화, 새정부 정책 수요 등에 대한 대응 필요
- * 생산가능인구 증감(만명, 연평균) : ('11~'20) 11.7 ('21~'30)△35.7 ('31~'40)△52.9

2. 재정여건

1] 코로나19 위기에서 재정이 민생경제의 버팀목 역할 수행

- 확장적 본예산, 7차례 추경 편성*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·국민경제보호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

* ('20.1차) 11.7조원, ('20.2차) 12.2조원 ('20.3차) 35.1조원, ('20.4차) 7.8조원, ('21.1차) 14.9조원, ('21.2차) 34.9조원, ('22.1차) 16.9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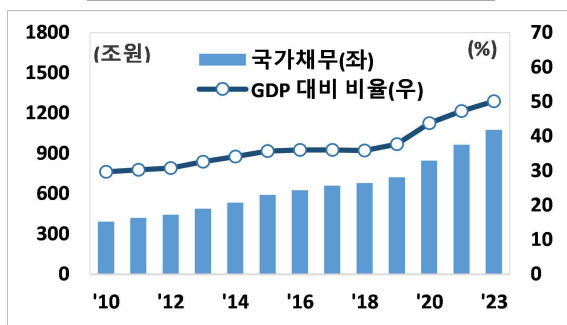
- 다만, 국가채무·재정적자가 확대되며 재정의 대응여력이 약화되고, 금리 상승*에 따라 국고채 이자 부담도 증가

* 국고채 금리(3년물, %): ('20년말) 0.976 → ('21년말) 1.798 → ('22.2월말) 2.24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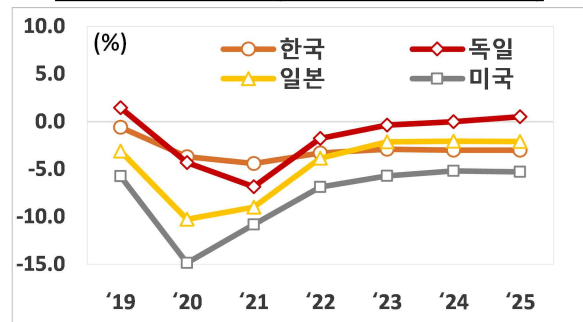
2] 세입측면은 리스크 확대, 세출측면은 경제반등·민생안정 필수요요 증가

- 국세·세외수입 등의 세입여건도 高유가·원자재 급등 등에 따른 경기회복 둔화, 교역축소 우려 등 감안시 불확실성이 증가
- 반면, 확고한 경제반등 및 민생안정 공고화, 디지털화·탄소중립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투자 요구
- 재정의 정책수요 대응여력 확대가 필요, 주요국도 이러한 노력을 강화 중

국가채무 및 GDP 대비 비율



주요국 재정수지(GDP 대비, IMF, '21.10.)



* 韓재정수지: 실적치 및 '21-'25 국가재정운용계획

3]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 확대 및 새정부 국정과제 뒷받침

- 전면적인 지출 재구조화(코로나 대응소요 종료 포함)를 적극 추진하여 재정을 위기이전으로 정상화하고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
-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제기된 새로운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이 적극 뒷받침

1. 기본방향

- ◇ 확고한 경제 반등·도약, 경제·사회구조 대전환 대응, 민생 안정 공고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
- ◇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전면적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역할 수행에 필요한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립

□ 확고한 경제 반등과 민생 안정 공고화를 위해서 경제활력, 민생안정, 미래투자, 국민안전 등 4대 부문에 중점 투자

- ① (경제도약) 대내외 불안 요인에도 소비·투자·수출 등의 회복 흐름이 지속되도록 「우리경제의 확고한 반등과 도약」 뒷받침
- ② (민생안정) 高물가, 高금리 등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, 물가·주거 안정 등 「민생안정 기반 공고화」
- ③ (미래투자) 코로나19로 가속화된 「디지털·저탄소 등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 선도」를 위한 투자 확대
- ④ (국민안전) 국민생명 위협요인과 新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「국민안전 보호 및 글로벌 경제안보 역량 강화」 추진

□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4대 재정혁신 추진

- ① (재정지출 재구조화)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 재조정, 의무지출 관련 근본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을 전면 재구조화
- ② (재량지출 절감) 집행 부진 및 보조·출연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직성 경비 등 제외 모든 재량지출의 10% 수준 절감
- ③ (재원관리 강화) 공공서비스 제공에 국유재산·민간투자 활용을 확대하고, 재정준칙 제도화 등 중기재정관리 강화
- ④ (열린 재정) 예산편성 과정의 민주성·투명성·개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열린 재정 실현

⇒ 4대 중점투자 및 4대 재정혁신('4+4 전략') 전면 추진

〈 '23년 예산안 전체 모습[案] 〉

목표	경제·사회구조 대전환과 국민안전·행복 보장	
기본 방향	경제도약, 민생안정, 미래투자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 전면적 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운용 혁신으로 지속가능 재정 확립	
4대 중점 투자	<div>1. 확고한 경제도약</div> <div>① 소비·관광 활력 회복 지원 ②수출 다각화 및 국내투자 인센티브 강화 ③ 중소·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 ④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초광역협력 본격화 ⑤주력산업 재도약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</div>	<div>2.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</div> <div>① 지속가능한 좋은일자리 창출 ② 촘촘하고 두툼한 사회안전망 구축 ③ 주거비 등 핵심생계비 부담 완화 ④ 소상공인 회복 및 Re-START 지원 ⑤ 청년·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</div>
	<div>3. 미래 투자 확대</div> <div>① 디지털경제 선도 인프라 구축 ② 경제사회구조 저탄소화 뒷받침 ③ 산업수요 맞춤형 미래형 인재 양성 ④ 기술경쟁 주도권 확보 R&D ⑤ 저출생 반등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</div>	<div>4. 국민안전과 글로벌 경제안보</div> <div>① 사회재난 예방 및 공정한 법질서 확립 ②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③ 물·미세먼지·폐기물 등 깨끗한 환경 ④ 첨단과학기술 기반 강군 육성 ⑤ 경제안보 역량 업그레이드</div>
	+	
	<div>1. 재정지출 재구조화</div> <div>①전략적 지출조정 ②코로나 한시지출·일몰사업 정상화 ③의무지출 제도 개선 ④정책금융 이차보전 사업 전환 ⑤사업구조 개선 및 중앙·지방 역할 분담</div>	<div>2. 재량지출 10% 절감</div> <div>①실집행 부진 사업 감축 ②연례적 이전용 사업 조정 ③공공부문 솔선수범 ④보조·출자·출연사업 재정비 ⑤각종 정부 재정사업평가 결과 반영</div>
4대 재정 혁신	<div>3. 신규재원 확보 및 재정관리 강화</div> <div>①유사기금 통폐합 등 정부재원 효율화 ②국유재산 개발·활용·매각 확대 ③민간투자 활성화 ④성과환류 및 사회보험 재정관리 ⑤재정준칙 제도화 등 중기재정관리</div>	<div>4. 열린 재정 구현</div> <div>①정책파트너와 정례적 협의체 신설 ②현장소통의 강화 ③예산·집행·사업정보 공개 확대 ④메타버스·온라인 청원 등 스마트 참여</div>

2. 4대 중점 투자

① 우리경제의 확고한 반등과 도약을 뒷받침

- (소비·관광) 방한·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거점도시,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고,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게 문화산업 집중 육성
- (수출·투자) 수출 품목·국가 다각화, 비대면수출, 통상분쟁 지원 등으로 무역리스크에 대응하고, 첨단기술 보유 유턴·외투기업 유치
- (中企·벤처) 중소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, 혁신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·R&D 등 지원 강화
- (균형발전) 광역메가시티와 강소도시를 연계 육성하고, 인구 감소·낙후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 지역특화 지원 강화
- (주력산업·공급망) 산단 스마트化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한 자동차·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가핵심자원의 선제적 비축

②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

- (고용창출)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,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노동전환 지원
- (사회안전망) 임신·출산·육아 전주기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, 취약계층 대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향상
- (생활안정) 식료품, 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, 양질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거부담 완화
- (소상공인) 위기 사업체 대상 채무관리·경영개선, 폐업 및 재창업 지원 등 패키지 신설로 소상공인 회복 및 Re-START 지원
- (취약계층) 자산형성·주거·일자리 등 청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, 농어민·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

3 디지털·저탄소 등 경제·사회구조 대전환을 위한 미래투자 확대

- (디지털) 메타버스·블록체인, AI·데이터 등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, '디지털 정부' 구현을 뒷받침
- (저탄소) 산업·에너지·수송 등 부문별 저탄소화 및 석탄발전 등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, 탄소중립 국민실천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
- (신기술) 기술패권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양자·우주 등 10대 국가 전략기술* 및 저탄소·환경개선 관련 기술산업 생태계 고도화 지원
 - * 10대 국가전략기술 : 인공지능, 양자, 우주·항공, 첨단로봇·제조, 이차전지, 반도체·디스플레이, 첨단바이오, 5G·6G, 수소, 사이버보안
- (인재양성) 디지털·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·신기술 교육·훈련을 확대하고,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과 질 좋은 평생 교육의 허브화를 위한 고등·평생교육 투자 확대
- (인구구조) 초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등 축소사회 적응, 고령사회 서비스 발굴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

4 국민안전 보호와 글로벌 경제안보 역량 강화

- (안전) 산업재해, 자연재해 등에 대한 선제적·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구제 등 법질서 확립
- (보건) 국민의 건강·생명권 보장 및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·지방 필수의료 인력·장비·시설 등 적극 확충
- (생활) 新유형 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 처리 고도화,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및 깨끗한 물 등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
- (국방·보훈) 핵·WMD 대응 핵심전력 증강, 미래戰 대비 R&D 및 장병 사기진작 등에 집중 투자하고, 국가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
- (경제안보) CPTPP*, IPEF** 등 新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하고, 개도국 지원을 위한 전략적 ODA 등 경제협력 강화

*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** 인도-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

3. 4대 재정혁신

① 전략적 지출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

- (전략적 지출조정) 경제·사회 여건 및 사업수요 변화를 반영하여, 분야·부처 내 투자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여력을 확보
 - * (예) 국방 분야: 병력 유지 예산 조정 → 첨단과학기술 기반 무기체계·교육훈련 투자
환경 분야: 성과 저조한 미세먼지 절감 사업 내실화 → 탄소중립 뒷받침
- (한시지출 정상화)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각종 한시·일몰 지원 소요* 등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
 - * 방역지원 사업,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, 고용유지지원금 등
- (의무지출) 법령개정 및 재정제도 개선 등을 통한 경직적 재원배분구조 개편으로 재정운용의 탄력성 제고
- (정책금융)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, 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수혜 규모는 유지·확대
 - * (예) 담보 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이차보전 방식 전환
- (사업구조 개선)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난지원 편성방식을 개선하고, 중앙·지방* 및 정부·민간 간 역할·재원 분담체계 재정립
 - * 초중등 및 고등·평생교육간 투자재원 배분 효율화 등

② 집행실적·성과평가 등을 고려, 재량지출 10% 절감

- (집행부진) 연례적 이월·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수준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조정*하고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집행개선
 - * (예) 최근 실집행 실적에 따라 △10%~△50% 조정
- (연례적 이전용) 관행적·반복적 이전용 재원 사업은 이전용 규모 등을 감안한 실소요 수준으로 선제적 감축

- (공공부문 출선수범)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절감*하고, 정부 위원회 중 한시·일몰조직은 원칙적으로 종료
 - * (예) 불요불급한 서류 최소화, 전자화를 통한 페이퍼리스 체계 구축 등으로 운영경비를 절감하고, 업추비·여비·특경비·특활비 등 주요경비 감축
- (보조·출연·출자) 보조사업의 보조율 체계를 원점 재검토하고, 관행적 출연·출자* 사업의 존속 여부 및 적정소요를 집중 점검
 - * (예) 모태펀드 출자의 경우 자펀드 결성 및 기 결성 자펀드의 투자 실적을 감안하여 편성
- (외부지적 반영) 재정사업 자율평가,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각종 재정사업평가 결과 성과미흡 사업 구조조정(예: △10% 조정)

3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준칙 등 재정관리 강화

- (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) 유사기금 통폐합으로 회계·기금간 칸막이를 해소하고, 특별회계·기금의 여유재원 최대한 활용*
 - * (예)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전출
- (국유재산) 민간의 자본·창의를 활용한 민간참여개발을 활성화 하고 공공청사(국가)+생활SOC(지자체) 등 복합개발모델 적극 발굴
- (민간투자) 민투사업 지원대상 확대*, 사업방식 다각화(수익형-임대형 혼합), 부대사업 허용 등을 통해 민자사업 전환 활성화
 - * (기존) 신규 도로건설 등 교통인프라 → (확대) 산업·생활 인프라, 개량투자 등
- (성과환류) 핵심사업평가, 일자리사업 평가 등을 통해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고,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
- (사회보험)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 하고,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·추진
- (재정준칙) 재정준칙의 원활한 도입·적용을 위해 '23년 예산안은 준칙 도입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편성

4 정책협의를·현장소통 강화 등으로 열린 재정 구현

- (정책협의) 자원배분의 효과성·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·부처 등 주요 재정정책 파트너와의 협의채널 신설·내실화
 - * (예) 지방재정협의체·재정정책자문회의 등 확대, 관계기관 정례협의회 신설 등
- (현장소통) 예산 편성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수요자·전문가 등과의 소통 강화
 - * (예) 현장소통의 대상(소상공인, 청년, 취약계층 등), 횟수 등을 확대
- (정보공개)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 편성·집행 현황, 부처별 사업정보* 등을 열린재정·디브레인 등에 통합 공개
 - * 부처별로 예산사업 설명서, 국회 제출 자료 등
- (소통 플랫폼) 참여예산, 설문조사 등 기존 참여 방식에 더해 메타버스, 온라인 청원 게시판 등 접근성이 높고 스마트한 플랫폼을 추가

4.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및 지출효율화 계획

(1) 보건·복지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코로나 이후 양극화 완화를 위해 촘촘하고 두툼한 소득안전망 구축
 -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, 빈곤층 추락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 강화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확대
 - 고용·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는 등 고용·사회안전망 보완
- ☐ 초저출생 기조 반등을 위해 출산·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
 - 육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 지원을 확대하고, 보육 서비스 질 제고 및 돌봄서비스 강화로 빈틈없는 돌봄지원체계 구축
 - 도심 등 수요가 높은 곳 위주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확충,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구조적 문제 대응도 지속
- ☐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대응해 소득·돌봄·의료지원 강화
 - 기초연금 지원, 시장형 노인일자리 확대 등으로 안정적 소득지원
 -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·요양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고,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지원
- ☐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통해 신변종 감염병 등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 위기 대응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
 - 지방의료원 신축 및 국립대병원과 연계 강화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공의·간호사 등 필수 의료인력 양성 확대
- 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K-바이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
 - K-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및 바이오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 병원 확충 등 비대면 헬스케어 활성화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대된 보건·의료 부문의 한시지출 사업을 정상화 하고, 건강보험·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
- ☐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전달체계간 연계를 강화해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

〈 일자리 〉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저탄소·디지털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분야 미래 인력양성 공급체계 지원 강화
 -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력수요를 사전에 발굴하여 직무전환 훈련 및 전직·재취업 서비스 등 지원 확대
 - 범부처 협업을 통해 생애주기별·숙련단계별 인력양성 체계를 강화하고, 기업 참여형 훈련 확대 등으로 직업훈련의 질 제고
- 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의 고용창출 지원
 - 신성장 분야의 창업 활성화와 중소·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 및 사업화 지원 확대
 -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근로자 교육훈련, 대·중견 기업과의 협력, 디지털전환 등 특화 프로그램 지원
- ☐ 청년·중장년·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
 -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, 직업훈련, 일경험 확보 등으로 유망분야 취업 지원
 - 중장년층의 고용안정과 활력있는 노후 생활 보장 등을 위해 계속고용-전직·전환 교육-재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강화
 - 육아기 부모의 일·돌봄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, 재택근무, 시간선택 근무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
- ☐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,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 등을 위해 산재 취약부문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
 - 소규모·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컨설팅, 기술지도, 유해·위험시설 개선 등 지원 강화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한시사업을 정상화하고, 집행부진, 성과 미흡사업은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축소·내실화
 - 절감된 재원은 신산업분야 미래인력양성,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, 민간의 고용창출력 제고 등에 재투자
- ☐ 고용보험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입확충·지출절감 등 건전성 개선 노력 강화

[2] 교육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교육 희망사다리를 강화하고,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중점 지원
 - 교육급여, 고등학교 무상교육, 국가장학금·학자금대출 등 교육비 부담 완화, 학업격차 해소 지속 지원
 - AR·VR·메타버스 등 비대면 교육 콘텐츠 개발,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·친환경 학교로의 전환 적극 투자
- ☐ 신산업 분야 등 고숙련·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소멸 대응 등을 위해 미래지향형 대학·지역발전 생태계 조성
 -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사업,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등을 공유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 확대
 - 지역별 핵심분야·산업에 대한 ‘지자체-기업-거점대학’간 협업과제, 직업교육 등 투자 확대로 맞춤형 지역인재 적시 공급
- ☐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질 좋은 평생교육의 허브화 등을 위해 고등·평생교육 투자 확대
 - 4단계 두뇌한국(Brain Korea)21 등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, 지역대학 활용 성인 경력개발 등 지역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
 - 생애주기별 고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확대,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 등 지속 지원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학령인구,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·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부문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 구조개선 검토
- ☐ 학습특별바우처 지급 등 코로나19 한시 지원 사업을 정상화하고, 장학금·취업지원사업 등은 수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소요 검토

[3] 문화 · 체육 · 관광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코로나19 이후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,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
 - 관광거점도시 조성 본격 추진 등 관광 자원을 확충하고 방한관광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·마케팅 추진
 - 농어촌민박·생활·야간관광 등 소규모 관광을 확산하고 건강·치유를 위한 생태·웰니스 관광 확대
 - 디지털기반 관광산업 축진을 위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확대하고 관광기업의 디지털 경영환경 구축 지원
- ☐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등 문화·체육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·지역간 문화격차 완화와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강화
 - 취약계층의 문화·체육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, 지역 문화인재 양성 지원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
 - 신진예술인의 창작여건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시장으로의 참여 기회 확대
 - 생활체육과 전문체육과의 연계 강화, 건강·체력관리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
- ☐ OTT·메타버스 콘텐츠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류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산
 -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, 제작지원, 인력양성, 제작환경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, 콘텐츠 전문기업 육성
 - 순수예술, 전통·대중문화 등 문화 전반에 신한류 창출 지원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사업을 정상화하고, 정책금융의 성과와 시장수요를 고려한 투자계획 마련
- ☐ 수입 기반이 취약한 기금의 지출효율화 및 수입 다변화 방안 모색, 문화·체육·관광 기금 간 칸막이 제거 및 탄력적인 여유재원 활용

[4] 환경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달성에 필요한 부문별 감축 수단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
 -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, 산업계 저감설비를 보강하고, 저탄소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녹색금융·인력·기술 투자를 확대
 - 전기·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, 충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온실가스감축 효과가 큰 상용차 전환을 집중 지원
 -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, 폐자원 열분해 시설,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 기술·개발 등 투자 확대
 - '23회계연도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안착 지원
- ☐ 청정 대기·깨끗한 물 서비스 공급 등 국민안심 생활환경 조성
 -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산업·수송·생활 등 부문별 핵심 배출원과 관련된 효과성 높은 저감 사업에 계속 투자
 - 안전한 물 서비스 제공을 위해, IoT·AI 등 첨단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상·하수도 구축을 지원하고 노후 상·하수도 정비도 지속 추진
 -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·가뭄 등 재난안전 예보·대응 투자 확대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'물환경' 관련 사업은 하천관리 업무 일원화에 맞춰 유사·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사업구조를 체계화하는 등 적정 수준 투자
- ☐ '미세먼지 저감' 관련 사업 중 집행이 저조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핵심사업 위주로 대체
- ☐ 무공해차 전환 사업은 전기차 가격경쟁력 상승을 고려한 적정 수준 보조금을 지원하고, 구매목표제 등 비재정적 수단을 적극 활용

(5) 산업·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·확산 가속화
 - 태양광·풍력·수소·ESS 등 미래 핵심 유망 에너지원의 R&D·보급·확산 및 관련 인프라 등 전주기 지원 강화
- ☐ 안정적 자원공급망 구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원
 - 희소금속 등 경제안보 핵심품목 중심으로 비축 확대, 해외 수입선 다변화 및 관련 인프라 보강 등 중점 지원
 - 반도체·이차전지·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R&D·사업화·인력양성 종합 지원, 첨단 외투·유턴기업 유치 기반 조성
- ☐ 경기 반등을 위한 주력산업 생산·수출기반 공고화
 - 산단 스마트화, 자동차·조선업 등 주력산업 인력양성 확대, 구조·융접 등 뿌리산업 공정 고도화 등 국내 생산역량 제고
 - 바이오소비재·디지털서비스·그린에너지 등 수출 품목 다각화, 비대면 수출지원, 통상분쟁 구제 등 무역리스크 대응투자 확대
- ☐ 위기 소상공인 회복·재기지원 및 강한 소상공인 육성
 - 위기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및 경영개선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, 폐업 희망자에 대한 사업정리·취업 등 원스톱 패키지 확대
 - 스마트기기 보급 및 온라인 진출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체질 개선
- ☐ 혁신 벤처·스타트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 지원
 - 비대면·바이오 등 미래 新산업 분야에 대한 창업·투자 유도 및 지속가능한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재양성, 스케일업 지원
 - 중소기업이 탄소중립, ESG,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적 구조 전환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전환 뒷받침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코로나19 등에 따라 한시적·일시적으로 늘어난 정책금융, 긴급 지원을 정상화하고, 소상공인 채무관리 등 집중 지원
- ☐ 단순 차입비용과 수익성 보조 역할을 하는 자금지원을 축소하고 생산성 향상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필수소요 위주로 내실화

[6] SOC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핵심교통망 확충, 산단 조성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국토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
 - 지역 경제거점을 도로·철도 등 광역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·생활권 육성 및 균형발전 뒷받침
 - 노후산단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반시설 등 재정비
- 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SOC 안전 및 생애주기 관리 강화
 - 주요 기반시설에 디지털·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SOC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안전 보호 강화
 - SOC 노후화에 대응하여 점검·유지보수 비용 적기 투입 등 선제적 관리로 미래 부담 경감
- ☐ 미래 모빌리티 육성,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산업혁신 가속화
 - 자율차·도심교통항공 등 新 교통수단 초기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및 실증·상용화 기반 마련
 - 자율주행·헬스케어 등 혁신서비스 구현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
- ☐ 저상버스 지원, 장애인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SOC 분야 질적 전환 과정에서 투자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성과 점검을 통한 내실화 추진
 - 사업목표 달성 여부,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지원소요를 반영하고, 사업체계 개편도 병행
- ☐ 그간의 SOC 확충정도, 교통수요변화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투자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

[7] 농림수산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농·축·수산 분야 디지털화·스마트화를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보
 - 인프라-생산-가공·유통-수출 등 농·축·수산업 전 과정에 걸친 디지털화 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 동력 확보
 - 스마트팜 혁신밸리,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농어업 스마트화 전환 촉진
- ☐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·어촌 활력 제고
 - 경쟁력 있는 청년 농·어업인 육성을 위해 진입·정착·성장 단계별 교육, 자금, 컨설팅, 창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
 - 농촌 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등 농산어촌 정주여건을 쾌적하게 조성하고, 농어촌내 돌봄·주거·교육서비스 확충
- ☐ 농업·수산·임업 공익직불제 안착지원 및 재해예방 강화
 - 소규모 농어가 소득안정 기능 강화 및 환경·생태·먹거리 안정 등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증진 직불제 안착
 -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원예·가축방역시설 등 사전예방과 농수산물 재해보험 등 재해피해 완충을 위해 노력
- ☐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사전적·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강화
 -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식량 수급안정 측면에서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식량안보 기반 구축
 - 농업관측, 채소가격 안정제, 자조금단체 지원 등 사전적·자율적 수급기능 강화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그간 지속 확충해 온 수리시설 등 전통적 농업SOC는 디지털전환 등을 통해 운영효율성을 높이고, 코로나 한시 지원사업은 정상화
- ☐ 기존의 농촌정비 등 관련 사업을 공간정비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사사업 통폐합, 신규사업 추진 등 재구조화

(8) R&D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미래 선도기술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관련 R&D 투자 확대
 - 시장선점·창출과 국가안보·공급망확보에 필수적인 미래 선도 기술을 국가필수전략기술*로 지정하여 R&D 집중 투자
 - * ①양자, ②우주·항공, ③인공지능, ④수소, ⑤사이버 보안, ⑥첨단바이오, ⑦첨단로봇·제조, ⑧5G-6G, ⑨이차전지, ⑩반도체·디스플레이
 - 저탄소 경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전환·산업공정·건축·수송 등 관련 분야의 R&D 적극투자
- ☐ 디지털 대전환, BIG3 등 주력산업 및 삶의 질 향상에 지속 투자
 - 포스트 코로나 시대,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혁신 유도
 - 미래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고도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한 BIG3(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) 분야 등 투자 지속
 - 국민의 생명·안전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난·범죄·교통·먹거리 및 식량안보 등 공공 R&D 투자 확대
- ☐ 기초연구·인재양성 등 세계 최고수준의 R&D 기반 조성
 -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는 정부 R&D 투자방향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도전적 과제 위주로 투자 유도
 - 국내인재 해외진출·해외인재 국내유치 등 글로벌 인재교류 및 반도체·인공지능·우주·양자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지원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일본 수출규제, 코로나19 등 위기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급격히 증가된 R&D 사업 정상화 및 중점투자분야에 재투자
- ☐ 정부의 기업 R&D 직접지원이 민간 R&D 투자를 구축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, 투자방식 R&D 도입 등 지원방식 다양화도 검토
- ☐ 국가출연연구소의 정부출연사업과 부처 R&D와의 유사·중복 여부를 재점검하고 관행적 출연사업을 통폐합

(9) 국방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전방위 안보 위협 대비,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과학 기술 기반 정예 군사력 건설 지원
 - 핵·WMD 대응 등을 위한 핵심전력을 증강하고 초국가적·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리 軍의 임무 수행능력 지속 보강
 - 우주, 사이버, 무인·자율 무기체계 등 미래전 대비 첨단핵심 기술 개발 역량 확충을 위한 국방R&D에 중점 투자
- ☐ 교육훈련, 군수, 시설, 정보화 등 국방분야 전반에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하여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 실현
 - VR/AR,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하여 시·공간적 교육훈련 환경 제한을 극복
 - 국방 모바일, 국방 클라우드 구축 등 모든 국방자원을 연결하여 미래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초연결 네트워크 구현
- ☐ 병영 내 성폭력 등 군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생활 여건 보장
 - 병영생활, 성고충 전문상담관 운영으로 장병 인권을 보호하고, 자기개발·초급간부 학위 지원 등 생산적인 복무여건 조성
 - 급식 및 피복 개선, 병영생활관·간부숙소 현대화 등 의식주 관련 장병 생활여건 지속 개선
- ☐ 무기체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등 방위산업 육성 추진
 - 유망 국방벤처에 대한 기술개발·마케팅, 무기 부품 국산화, 해외시장 조사·분석 다각화, 방산기술 보호 등 집중 지원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상비병력 감축과 연계되는 예산을 절감하고, 집행부진·성과미흡 사업 구조조정, 사업 우선순위 점검을 통한 지출 재구조화 실시
- ☐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에서의 물가상승률 과다 반영 사례를 개선하는 등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 강화

[10] 외교·통일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익·국민 중심 외교역량 확보
 - 공급망 교란 위험요인 조기경보체제 구축, 첨단기술 협력분야 발굴 및 기술강국과 양자협력 모색 등 전략적 경제안보외교 추진
 - 전염병·전쟁 등 해외재난 발생시 신속한 우리 국민 지원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영사조력 확대 등 재외국민 보호 강화
- ☐ 공적개발원조(ODA)는 공여대상 국가·분야별 전략적 자원 배분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및 지원효과 극대화
 - 중점 협력국 중 협력 잠재력이 높은 동남·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·디지털·보건 분야 집중 지원
 - 기존의 정부 내 사업 연계를 넘어 민간·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전략 패키지사업을 통해 원조 효과성 및 국익 증진 확대
- ☐ 남북간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,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
 - 대북·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업 플랫폼 운영을 강화하고, 대국민 통일·북한 정보제공 기관인 북한자료센터 기능 확충 추진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국제기구 분담금 정량·정성 평가를 통해 저성과, 유사·중복 분담금은 조정하고,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

[11] 일반·지방행정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광역메가시티와 지역 강소도시를 연계 육성하고, 인구감소·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 확충
 - 인구감소지역의 획기적 생활개선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가-지자체 연계·협력 사업 발굴 지원
- ☐ 축적된 데이터와 과학적 프로세스에 기반한 행정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 디지털 정부 본격 추진
 -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부 통합 플랫폼 구축, 선제적인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·빅데이터 등 적용 확대
 - 통합 플랫폼 구축, AI·빅데이터 등 활성화의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 전환(민간 우선) 가속화
- ☐ 신산업 창출·지속적 성장을 위한 혁신조달·정책금융 역할 확대
 - 혁신기업의 성장·도약 지원을 위해 혁신조달 시범구매사업 확대 등 혁신조달 실행을 적극 뒷받침
 -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·지속
- ☐ IT기술·비대면 전자조사 등을 활용한 국가 기본통계 생산 효율화, 과세기반 확충·납세편의 제공 등을 위한 조세행정 인프라 지원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지역 방역 일자리, 긴급수급 조달 물자지원 등 위기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급증한 사업에 대한 정상화 추진
- ☐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시 클라우드·공개SW활용 유도, 기존 시스템에 대한 운영성과 점검 등을 통해 정보자원 투자 효과성 제고

[12] 공공질서·안전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아동·여성·노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및 대응, 범죄피해자의 정서적·신체적 피해구제 및 일상회복 지원의 통합관리
 - 아동·노인 등 학대, 스토킹 범죄, 사이버범죄 등 신종 범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경찰의 시공간적 현장 대응능력 강화
 -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부터 범죄피해 구제,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
- ☐ 치안·수사·재판·교정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인프라의 개선 및 확대 지속 추진
 - 인권친화적 수사·재판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·여성·장애인 등 전용조사실, 증인지원실 확충 및 과학수사 인프라 지원 강화
 - 과밀수용 해소, 공기순환장치 설치 등 수용시설 3밀(밀집·밀접·밀폐) 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지속 개선
- ☐ 재해·재난 대비 예방인프라 강화 및 신속대응 체계 확충
 - 풍수해 피해에 대비 재해위험지역 정비 내실화 및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확대, 지진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인프라 보강
 - 대형산불·지진 등 특수재난 신속 대응 및 국가 단위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·해양경비 분야 훈련·장비 투자 확대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의경 폐지, 자치경찰 지방이양 등 정책 환경, 사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량지출 사업의 효율화를 통한 합리적 조정 실시
- ☐ 재난안전사업평가·사전협의제도 등을 통한 유사·중복사업 조정, ICT기술 기반 재난·재해 대응장비 효율화·표준화 등 추진

〈 안전투자 〉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기후변화 대비 대규모 재난 예방투자 및 대응체계 강화
 -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에 대비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내실화하고 풍수해보험 가입 제고를 통한 민간 차원의 대응력 강화
 - 산불 등 산림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, 지진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시설물 보강 등 지원
- ☐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생활안전 분야 중점 투자
 - 산업재해로부터 취약한 소규모·영세 사업장 대상 산재예방 컨설팅 및 시설건립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강화
 - 교통안전·감염병 관련 투자를 내실화하고 시설물안전 및 식품·의료안전 등 취약분야 투자 확대
 - 건설현장·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고위험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화재조사 과학화 등 화재 대응능력 제고 지원
- 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및 대국민 안전 인식·홍보 확대
 - 대형화·복합화하는 재해·재난에 대비 ICT기술 및 민간방재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지원
 -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·물놀이시설 등 안전교육 투자를 강화하고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 등 운영 내실화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재난안전사업평가 및 사전협의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유사·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ICT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투자 효율화 제고
- ☐ 대규모 재난 대응·복구 과정에서 늘어난 재난·재해대책비의 조정 및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통한 재난지원금 경감 추진

제2편
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

① (경제 여건) 거시경제 불확실성 지속 및 구조적 문제 심화

※ 제1편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

② (수입여건) 사회보험성기금 중심으로 전체 수입은 증가세 지속

- 사회보험성기금은 가입자 확대, 소득 증가 등에 따라 자체수입 등 증가세 유지 예상
 - 사업성기금 수입은 법정부담금, 용자원금회수 등의 증가폭 감소로 증가세 둔화 전망
-

③ (지출여건) 확고한 경제반등 및 민생안정 공고화, 디지털화·탄소중립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소요 증가

- 공적연금급여 증가,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등 사회보험성기금 지출소요 지속 증가 예상
 - 코로나로 위축된 관광·중소기업 지원, 디지털 전환, 저탄소화, 미래 핵심기술 R&D 투자, 국민안전 보호 강화 등 지출 증가 전망
-

④ (기금 수지) 코로나 위기극복과정에서 주요 기금 재정건전성 저하

- 사회보험료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나, 공적연금급여 증가와 사업성기금 지출 확대 등으로 기금 수지 악화 전망

-
- ① 확고한 경제 반등과 도약, 민생 안정, 사회구조 대전환,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
-
-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·중소기업 등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확고한 반등과 도약 뒷받침
 -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, 소외계층 주거지원 확대,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기반 확충
 - 디지털 전환, 저탄소화 추진, 미래 핵심기술 R&D 투자 지원 등 경제·사회구조 대전환을 위한 미래투자 확대
 -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, 산재 예방 투자 강화 등 국민 안전 강화, ODA 등 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
-
- ② 재정지출 절감, 융자사업의 이차보전으로 전환, 중장기 재정추계 내실화 등을 통해 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
-
- 재정지출 투자 재구조화, 재량지출 절감, 코로나19로 인한 한시·일몰지원사업의 위기 이전수준으로 조정
 - 유사기금 통폐합, 기금 여유재원을 통합재원으로 활용,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출규모 절감 추진
 - 4대 연금의 수입과 지출 균형 유지를 위해 중장기 재정추계의 내실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

 ① 우리경제의 확고한 반등과 도약 뒷받침

- 코로나19 이후 조속한 경제반등을 위해 관광, 중소기업 지원 등 내수활성화 뒷받침
 - (관광진흥기금)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시장의 회복을 위해 관광거점도시·스마트 관광도시 등 글로벌 관광지 집중육성
 - (무역보험기금) 수출중소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원자재가격 급등 등에 대비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지원
 - (중소기업진흥기금) 유망 중소기업·일자일창출 우수기업 등 지원을 통해 창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지원 강화

 ② 서민생활 안정 기반 공고화

-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,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
 - (고용보험기금)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,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근로자 노동전환 지원
 - (주택도시기금) 실소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·신혼부부 등에 대해 질 좋은 공공임대 공급 등 소외계층 지원
 - (소상공인진흥기금) 위기 사업체 대상 저금리 대출전환, 재창업 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 및 Re-START 지원

③ 디지털·저탄소 등 경제·사회구조 대전환을 위한 미래투자 확대

□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·저탄소 전환,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핵심 R&D 투자 지원

- (정보통신·방송발전기금) 인공지능, 클라우드 등 데이터 산업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, VR/AR, 메타버스 등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
- (기후대응기금)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, 산업·노동 전환 지원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달성에 기여
- (산업기술촉진기금) 산업기술 분야 R&D 재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 등 R&D 장려·촉진 지원
- (전력기금) 탄소중립 및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, 전력계통 안정화,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&D 투자 강화

④ 국민안전 보호와 글로벌 경제안보 역량 강화

□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, ODA 등 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

- (건강증진기금) 감염병 예방·관리 및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
- (산재보험기금)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재정 지원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기술 지원
- (대외경제협력기금) 그린·디지털, 보건 ODA 등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

① 공 통

-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을 재조정하고 집행 부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 절감 추진
-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각종 한시·일몰 지원 소요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

② 기금 유형별 지출 효율화 방안

① (사회보험성 기금) *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

- 국민연금·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의 중장기 수입과 지출의 균형 유지를 위한 재정추계 내실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
-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등 기금수입을 확충하고, 기금운영비·사업비 등 지출 전반에 걸쳐 지출효율화 추진

② (사업성 기금) * 주택도시기금, 소상공인지원기금 등

- 기금별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
- 기금 수지가 악화된 기금은 재정위험 요인 진단·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기금 수지 개선방안을 마련

③ (금융성·계정성 기금) * 공자기금, 신용보증기금 등

- 보증관리 강화를 통한 대위변제 축소, 구상채권 회수 확대로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금에 대한 운용배수를 안정적으로 관리

③ 유사 기금 통폐합 등 기금 정비

- 정부 지원으로 운용되는 기금의 존치 여부 및 유사중복 기금에 대한 통폐합 추진
 - * 기금수입의 80%이상 일반회계 및 복권기금에 의존, 기금관리기관과 수입원이 유사한 기금 등
- 기금존치평가 기준·결과를 활용하여 정비 원칙을 수립하고 기금 존치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

④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재원으로 활용

- 기금 설치목적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통합재원으로 활용
-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은 타 회계 등으로부터 전입금을 축소 또는 폐지

⑤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

-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여 수혜자 확대 및 지출 효율화 도모
- 복지성 지원 등 민간 대체가 어렵거나, 재원절감 효과가 없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검토